지방자치실천포럼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12

December 2013 | vol.53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만드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







지방자치실천포럼 중계
– 한국의 국제 개발 협력 왜 & 어떻게
: 최외출 영남대학교 부총장
– 포럼위원 토론 요약

특별대담 :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슈대담
– 황명선 논산시장
– 박우량 신안군수

이달의 Issue
–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쟁점과 개선방안
– 영국 맨체스터 시의원의 지원체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04


13

CONTENTS

이달의 Issue

– 지방선거와 정당공천

04 **지방자치실천포럼**
– 한국의 국제 개발 협력 왜 & 어떻게
: 최외출 영남대학교 부총장
– 포럼위원 토론 요약

13 **특별대담**
– 안희정 충남도지사

19 **이슈대담**
– 황명선 논산시장
– 박우량 신안군수

32 **논단**
–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쟁점과 개선방안





42 **해외우수사례**
– 영국 맨체스터 시의원의 지원체계

46 **지방자치단체 탐방**
– 충청남도에서 만나는 찬란했던 700년 백제의 문화

51 **연구원 동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실천포럼 통권 제53호 / **발행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이승종 / **편집위원장** 오은주 **간사** 금창호 **위원** 이효 주재복 김대욱 윤영근 김도형 **담당** 탁영지 / **연락처** T 02·3488·7300 F 02·3488·7309 / **홈페이지** www.krila.re.kr / **디자인** (주)소프트하우스

● 본 지방자치실천포럼은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메일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무료) **newsletter@krila.re.k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지방자치실천포럼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지방자치실천포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이승종)은 지난 2013년 6월 26일에 지방자치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방자치실천포럼」을 창립하였다.
「지방자치실천포럼(공동대표: 박재창 교수, 이승종 원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업의 장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포럼 목적
-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지방 국정과제에 대한 국정철학의 공유 및 실천적 대안 논의
- 지방 현안과제에 대한 관-학-연간 소통 및 대안모색 기회 확대

■ 포럼 구성
- 공동 대표 : 박재창(숙명여대 교수), 이승종(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 정부(중앙, 지방)-학계-연구원 등 55인의 인원 구성
- 구성 원칙 : 지방자치 관련 학(행정학, 재정학, 지방자치 관련 주요 학회 및 대학, 언론 등)-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협의회)-연(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계에 의한 지방자치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 중기 발전 모델 :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며 지역순회를 통한 국민 담론의 장으로 발전

■ 기조연설
- 1회 :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과 지방자치의 과제(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 2회 : 지방자치 관련 국정과제의 추진전략(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
- 3회 : 국민행복시대의 지방자치(김동완 국회의원)
- 4회 : 다원주의적 지방거버넌스의 진화(이달곤 전 안전행정부장관, 가천대학교 석좌교수)
- 5회: 한국의 국제 개발 협력 왜 & 어떻게(최외출 영남대학교 부총장)

최외출 영남대학교 부총장

한국의 국제 개발 협력 왜 & 어떻게



한국의 국제 개발 협력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새마을 운동이라는 근본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개발, 주민 참여, 자치 행정이라는 부분에서 새마을 운동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6·25전쟁 당시 한국을 지원한 나라는 67개국으로, 당시의 도움이 우리의 오늘을 존재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의 국제 개발 협력은 한국전쟁 당시에 지구촌에 진 빚을 갚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근면, 자조, 협동을 그 근본정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은 그 정신적 기조로서 근면·자조·협동을 설정하게 되고 그 추진 방법으로서는 우수한 지도자의 헌신적 봉사를 기조로 하고 동시에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지원이라는 방식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마을운동은 대통령의 절대적인 후원과 우수한 남녀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정부(공무원과 정부지원)라는 3자의 연합이 핵을 이루면서 추진된 국민운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능한 지도자의 유무가 새마을 운동의 성패를 좌우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초기에는 단순한 농가의 소득배가운동이었지만 이것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부터는 도시·직장·공장에까지 확산되어 근면·자조·협동을 생활화하는 의식개혁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선진국대열에 꼭 진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강하게 심어준 정부주도하의 국민적 근대화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은 1969년의 3선 개헌, 1971년의 대통령선거와 비상사태선포, 그리고 1972년의 유신헌법 통과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의 형성과정에서 진행되었으며 새마을운동의 본격적 전개가 유신체제와 더불어 진행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새마을 운동 초기의 농촌개발사업에서 출발하여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엄청난 물량적·정신적 성과를 얻어가면서 점차 비농촌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는 새마을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마치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새마을 운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시대 당시에도 공화당이 위기에 놓이자 공화당 대표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공화당을 살리기 위해 새마을 운동의 지도자를 공화당에 입당시키자고 했으나 대통령이 나서서 새마을 지도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공표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시대는 옆집에서 사는 독거노인이 돌아가셔서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부산에서도 독

거노인이 돌아가신지 5년 만에 발견된 사건도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이웃들 간의 정과 같은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새마을 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생긴 법 중에 하나가 눈이 왔을 때 자신의 집 앞에 쌓인 눈을 쓸지 않으면 벌칙을 받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을 쓴 것이 아니라 이웃들끼리 서로 인사도 주고받고 안부를 전하는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들 어록 쓰기)

노무현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였을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면, 최보식 칼럼에 잘 나와 있습니다. 2003년 알제리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과거에 북한보다 더 못 살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와서 더 잘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이 때 노 대통령이 일어나서 새마을 운동 노래를 불렀다고 칼럼에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originality를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중국에 가서 신농촌(新農村)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아프리카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의 김치가 일본에서 기무치로 바뀌어 전 세계에 소개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새마을 운동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32개



국이 방문하여 그 중 107개국이 합숙 교육을 받고 갔습니다. 베트남에서 와서 현재 자신들의 수준이 한국의 70년대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하고 경제를 포함한 각 부분을 배우기 위해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같이 지방행정의 전문가들도 이런 상황에 앞장 서서 베트남에서 자신들의 지식 등을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 개발 협력이 외국에 전파되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 보면, 우선 다른 운동들을 외국에 전파해서 실패한 이유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일 큰 실패한 이유는 우리 시각으로 그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구촌 공동번영을 목표로 협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국가 간의 협력이 요구되는 시기에 시대적 가치나 이슈를 해결하는 중심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공동체 운동으로의 발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새마을 운동은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 2.0은 나눔, 봉사, 그리고 창조라는 기조를 가지고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마을 운동 2.0은 과거의 방식을 탈피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서의 근본적인 변화는 기존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방식만을 바꾸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정형화된 방식을 만들기보다는 수요에 맞는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마을 운동의 정신은 도시를 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는 의식이 무너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곳에서는 국민에 맞는 바람직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면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국내의 새마을 운동 2.0은 지역에 맞게 선진시민의식을 가지고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어느 부처가 주도하지 않고 각 마을이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의 새마을 운동도 이와 비슷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에서의 원조를 하는데 있어서 실패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우리의 시각으로 현지인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현지화입니다. 현지화라는 것은 국내의 새마을 운동과 같이 지역에 맞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지인들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 자신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을 보장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전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마치 꽃과 벌이 만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벌은 꽃의 꿀을 가져가지만 상처를 내지 않고, 오히려 꽃의 수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외에서의 새마을 운동도 이와 같은 점을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해외에 전파하면서 그들에게 나눔, 봉사, 그리고 배려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경영학에서 말하는 프리마케팅인데, 새마을 운동의 기본적인 가치가 한국의 프리마케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바티칸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가, 인구 약 800명의 국가가 세계 인구 12억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지난 50년을 잘 정리하고, 앞으로의 50년을 생각해보면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티칸 모델을 본받아 한국이 국제 사회에 이태석 신부의 모습과 같이 가슴으로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한다면, 그것이 국력을 높이고 국위를 신장하고 국제 사회에 진 빚을 갚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 운동을 평가할 때, 부채가 많다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부채를 통해 어떠한 자산을 마련하였으며 도농 간의 소득 격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등 긍정적인 부분에도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광국 한국행정학회 회장



최외출 부총장님과 몇 년간 같은 학교에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항상 사업성이 없는 학문을 하셔서 걱정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요새 막스베버의 [직업으로서의 학문]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 직업으로서 학문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 열정, 소명 의식, 그리고 책임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어떻게 글로벌화를 시켜서, Win-win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행복을 말로만 하지 말고 각 부처에서 무한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

저도 새마을 운동을 내무부에 있을 때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글로벌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때, 아쉬웠던 것이 사람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외에 대한 지원은 주로 물량과 인프라의 지원만 존재하였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위해 각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리더쉽, 즉 새마을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호철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

단국대학교에 지역 개발학과가 원래 존재하였는데, 수요가 없어서 부동산 관련된 학과로 바뀌었습니다. 그 와중에 키르키즈스탄에서 온 학생이 새마을 운동과 관련하여 논문을 쓰고 싶어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영문으로 된 논문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마을 운동의 학문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점들이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숙주 전라북도 순창군수

시골에서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클린 순창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이와 같은 운동을 운영하는 조직은 새마을 운동 조직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앞에서 발제하신 내용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새마을 운동의 기본적인 가치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새마을 정신은 공동체 의식과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과거의 방식, 즉 중앙 주도의 방식에서의 정신을 새마을 운동 2.0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유효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규모도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더 작은 단위를 발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병용 경기도 의정부 시장

새마을 운동의 결과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크게 중앙집권적 정신과 효용성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은 지방 자치의 효용성에 대해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마을 운동은 앞으로 지방 자치를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농촌형 구조로 만들어진 새마을 운동을 지금 도시 중심의 구조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대해서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리 한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

특별대담 안희정 충남도지사

내포신도시 시대의 충남, 새로운 도전과 발전을 선도하는 충남도지사

일시 및 장소 / 2013.10.31.(목)
인터뷰 대상 /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인터뷰 진행 /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이승종 원장 : 도정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지사로 재임하신지도 3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도정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강조하신 점이 있으시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희정 충남지사 : 우선 충남도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 행정지도자나 마찬가지지만, 자신이 이끄는 조직을 공정하게 관리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편을 든다든지, 편향되게 일한다면 불신을 받게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도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충남도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과로 공정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 일 잘하고 맡길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뢰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민 모두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지방정부가 대안과 정책비전을 갖고 일하고 있다' 는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승종 원장 : 충남 도지사로 취임하신 이후로 충남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 결과로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내세우고 싶으신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안희정 충남지사 : 3년 동안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공공분야의 행정혁신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3.0 사업에서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정보 분야의 투명성에 있어서 충청남도가 여타 시도와 달리 재정회계지출, 각종 결재문서, 행정문서 공개비율에서 좋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또 도정 1순위로 품목별·지역별 지도자들과 농업혁신운동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여기에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서해안 시대를 맞아 지역 경제성장률에 있어서 울산과 함께 1~2등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특히 인구증가에 있어서 지방 중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과 번영에 충남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승종 원장 : '정부3.0 정책'에서 충청남도는 지방차원의 대표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추진한 결과인지요? 중요한 것 1~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안희정 충남지사 : 저는 충청남도 민선5기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3농혁신', '행정혁신', '자치분권' 등 3대 혁신을 도정의 핵심기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혁신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제로-100」 프로젝트와, 「융복합 행정」이 정부3.0에서 내세우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와 매우 유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로-100」 프로젝트는 정보의 공유와 공개를 통해 '업무누수는 0%, 정보공개는 100%' 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0년, 3개 분야 9개 개선과제에 137억을 투자하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제로-100 프로젝트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보공개 메뉴를 홈페이지 전면에 배치하고, 세입, 세출, 계약 관련 정보 등 재정공개와 도민이 요구하기 전에 주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사전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간 업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도정과제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책포털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융복합 행정」은 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민과 관이 협력하고,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자 추진하고 있는 시책인데, 그 주요한 사례가 '물 통합관리'로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 중앙, 도와 시군, 유관기관 등이 위원회를 만들고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내부 부서간에는 물 관리 정책을 공유하고, 예산을 연계하면서 효율적 추진방안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로-100」 프로젝트와 같이 우리도 혁신시책과 정부3.0 계획을 연계해서 '일 잘하고, 유능한 지방정부', '투명하고 공정한 충남도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승종 원장 :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의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충남의 공동체 활성화 관련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희정 충남지사 : 충남의 공동체 활성화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회적경제정책 추진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을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직으로는 '11년 1월에 신설된 사회적경제담당과 동년 3월에



설립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조례'를 제정하여('12년 7월) 여러 정부 부처의 유사 사업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경제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4대 분야 24개 과제를 선정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주체 육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132개, 마을기업 80개, 협동조합 80개를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체들의 성과 제고를 위해 민간주도형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익년도 예산편성 시 사회적경제 주체 의견 수렴·반영, 연 4회 충남형 사회적기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진입 기회 확대, 우수 사회적기업 발굴 및 확산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경영, 회계 등 오피스 업무 밀착 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경제 CEO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첫째, 지역 및 업종 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조직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둘째, 사회적경제의 지역사회 공동협력을 강화하며(3건 19개 업체 참여), 셋째, 사회적경제의 홍보를 위한 전국단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및 경영역량 강화에 기초하여 수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따숨」개발,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전시판매전 개최(5개 시군), 농사랑 온라인 쇼핑몰 내 사



회적기업 마을기업 상품관 마련, 지속적인 판매망 구축을 위한 지역 생협 등 입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역량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의 발굴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하여 역량 있는 예비 사업자 발굴·육성,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경제 자립기반 지원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자생적인 발전을 위하여 마케팅, 경영등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방송,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로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상시판매장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 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따뜻한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발전적인 시책 등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승종 원장 : 충남의 향후 경제 발전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도에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며, 도민에게 보내는 희망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희정 충남지사 : LG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3.1%에서 내년에는 3.4%로 예상되고, 우리나라는 내년에 3.6%로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충남의 경제 전망은 국내외 경제여건에 부응하는 성장이 기대됩니다. 특히, 우리 도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양적·질적 성장의 바탕 하에 소득의 역외유출 문제를 해소하고, 실리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 불균형 해소 등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충남의 향후 경제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경제 주체들이 협력과 상생에 기초하여 경제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민 모두가 함께 내일의 꿈을 위해 도전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종 원장 : 충남도청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포 신청사 시대를 맞이한 충남의 미래 비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희정 충남지사 : 우리 충남은 환황해경제권의 중심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환황해경제



권은 중국 경제의 급성장으로 EU(유럽연합),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였습니다. 현재 연간 교역규모가 6조$로 세계교역량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 최대의 경제권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환황해경제권 시대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거점도시로 내포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 내륙과 서해안 균형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서해안 중심의 해양물류 및 해양관광 중심의 항만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당진·평택항을 중부권 대중국 물류의 거점항으로 육성하고, 대산항을 석유화학 지원항과 국제여객항으로 태안항, 대천항, 오천항 등의 연안항을 전략적으로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륙과의 물류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대산~당진, 당진~천안, 평택~부여 고속도로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 서해선 복선전철화 사업 등 철도망 구축 등 SOC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네트워크형 도시체계 구축을 통해 충남이 환황해권시대의 경제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리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슈대담 황명선 논산시장

시민 모두가 행복한 100년 논산을 만들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



주재복 연구위원 : 바쁘신데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선 5기가 시작된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시정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다는 평을 듣고 계신데, 그 동안의 소회와 주요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황명선 시장 : 2010년 7월 취임 이래 3년 6개월여 동안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일즈 시장, 세일즈 공무원의 자세로 국회와 중앙부처, 유치대상 기업과 일선 현장에서 쉼 없이 고군분투해왔습니다.
그동안 꾸준한 기업유치는 물론 영외면회제 전면 시행과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우선 추진지역 선정, 충청권 광역철도망 논산연장안 확정 등 굵직한 성과로 13만

논산시민들이 염원해 온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특히, 2013년 한해 동안은 민선5기에 일궈낸 결실을 기반으로 큰 도약을 위해 목표로 하였던 장기적 발전기반을 다지면서 논산의 신성장동력을 다듬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안문제인 KTX 훈련소역 신설, 육군훈련소 면회부활에 이은 위수지역 설정 등 내부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탑정호수변개발사업과 연계한 탑정호권역 인프라 확대와 기호유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왔습니다. 아울러 국내는 물론 러시아, 일본에 이어 미국 LA까지 영역을 넓혀 국제교류 기반을 다졌으며, 강경젓갈을 비롯해 딸기 등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도 마련했습니다.
대외적인 평가에서도 2013 대한민국 경영대상, 2013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수상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최초로 성산 효재단 주최 「성산효행대상」을 수상하는 등 논산시가 전국 최고의 효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주재복 연구위원 : 짧은 기간에 정말 많은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많은 정성을 들이시는 걸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명선 시장 :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우리시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 온 시정방향은 "활력 있는 경제도시" 조성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어야만 경제활동 의 핵심층인 청·장년층이 논산을 찾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논산을 20만, 30만 도시로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지난 3월 노성 농공단지에 고향식품 등 5개 기업 투자협약체결, 5월 한미식품 기공식 등 우량기업 투자 유치를 비롯해 농공단지 조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지정된 노성면 읍내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노성농공단지는 지난 10월부터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들어갔으며, 12월부터 보상에 착수, 2015년까지 준공 및 입주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30,640㎡ 규모로 조성되는 강경농공단지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부터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내년 9월까지 준공하고, 논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한미식품을 시작으로 ㈜덕산식품, ㈜후레쉬코, ㈜미젠 등 식품전문회사가 단계적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9월부터 건축공사에 착공한 양지2농공단지는 2014년도 상반기 중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현대알루미늄 등 4개 계열사의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야곡면 야촌리 일원에 조성중인 가야곡2농공단지는 지난 7월부터 156필지 274,237㎡에 대한 보상협의 중으로 연말까지 무난하게 보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도부터 동양강철 등 4개 계열사가 입주할 계획이며, 약 1,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시는 이들 4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입주가 완료되는 2015년도 이후에는 약 2,900여명의 고용창출과 지역농산물 수급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논산 1,2일반산업단지와 강경농공단지는 「상생산업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공동주택 신축으로 기업과 근로자, 지역 주민이 상생 발전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양지2, 강경·가야곡2, 노성특화 농공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 순환형 우량 기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경제적 자생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논산 1,2일반산업단지 내에 생활편익시설을 갖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등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동산일반산업단지, 강경 농공단지, 노성특화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로 수질오염을 방지 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재복 연구위원 : 시장님은 문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현재 논산시는 여느 대도시 못지않은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시장님의 문화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소신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명선 시장 : 그 동안 행정은 건물을 올리고 길을 넓히거나 신도시를 개발하는 하드웨어적 부문에 치중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시민들의 정신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하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농복합형 도시인 논산은 취임 당시 여느 중소도시와 마찬가지로 문화 혜택에 있어 불모지인 실정이었습니다. 시민과의 폭넓은 공감을 통한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그 동안 품격 있는 공연 유치, 문화관광 기반확충, 문화재 보존관리와 생활체육 활성화 등 문화정책 활성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보편적 문화도시, 문화예술이 흐르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다양한 장르별, 계층별 문화적 욕구 충족과 갈증 해소를 위해 월별·분기 별로 테마 있는 문화예술공연, 문화의 거리 등 작은 음악공연 활성화, 시민의 날 음악회, 공연예술단체 지원 등에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조수미 콘서트, 조지윈스턴 피아노 솔로콘서트, 금난새와 유라시안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 등 품격 있는 문화공연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왔고, 월 평균 4~5회의 크고 작은 공연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도도 매우 높고, 공연문화도 정착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문화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양 함양을 위해 초등학생 1,300명의 서울문화체험, 저소득층 청소년과 효행학생 55명의 해외문화체험, 고등학교 1학년생 1,100여명의 우수대학 현장체험을 비롯해 청년작가 박범신 전국백일장, 청소년 동아리 길거리 공연 활성화, 청소년 한마음 음악회, 고3 수험생을 위한 희망콘서트 개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등에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 논산으로 귀향해 활발한 집필활동을 하고 있는 박범신 작가와 함께 전국백일장 행사, 인문학 특강, 고향땅 걷기행사, 출판기념회, 오픈하우스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문화적 기반구축과 업그레이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과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정책 활성화로 논산을 전국 제일의 문화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주재복 연구위원 : 올해 들어 어느 해 보다 활발하게 딸기를 비롯해 젓갈 등 지역 농수특산물 수출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해외 홍보와 세일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황명선 시장 : 올해 우리시는 국내는 물론 미국 H마트와 러시아 그라스프사 우수 농·특산물 수출 확대에 이어 논산을 대표하는 강경젓갈이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물론 인도네시아, 홍콩 등에도 논산딸기 수출길이 열리고 있으며, 멜론, 토마토, 수박, 새송이 버섯, 파프리카 등도 추가될 전망입니다.
지난 7월에는 일본에서 국제교류 협력과 농산물 세일즈 강행군을 펼쳐 가가와현 다카마츠시와 시즈오카현 고텐바시와 행정, 문화, 교육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협력 기반을 다졌고, 하나마사마트를 방문해 딸기, 메론, 수박, 방울토마토 등 지역 우수농산물의 수출 합의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또한 LA강경젓갈축제 현장판매에서 15만불을 비롯해 미국 H마트 25만불 수출계약, 그리고 코메리카사 미국 내 연간 200만불 강경발효젓갈 수입계획 등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대표적인 품목인 강경젓갈은 실추된 강경젓갈의 명성 회복을 위해 착한 가게 지정 및 적극적인 자정활동을 전개하여 강경젓갈 명품화를 이끌어내는 저력을 발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경젓갈시장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한 2013년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주재복 연구위원 : 논산시가 내년이면 탄생 100년을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100년 논산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서 마무리하고 싶은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명선 시장 : '활력 있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양지2, 강경·가야곡2, 노성특화 농공 단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 순환형 우량 기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경제적 자생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또 우리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KTX 훈련소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국가적 안보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탑정호 힐링생태 체험교육관,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탑정호 수변데크 둘레길 조성과 달빛 걸린 계백마을 경관사업을 적극 추진해 기존 관광자원인 백제군사박물관 및 수변생태공원과 연계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하여 시너지효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탑정호권역 관광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주변 부지에 자연 친화형 리조트시설을 건립해 자연환경·문화자원이 연계된 국내최고의 체류형 휴양·레저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탑정호 힐링생태 체험교육관,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탑정호 수변데크 둘레길 조성 등으로 탑정호 권역 관광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주변 부지에 자연 친화형 리조트시설을 건립해 자연환경·문화 자원이 연계된 국내 최고의 체류형 휴식레저 체험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운영을 통해 충청(기호)유교문화권 종합개발의 초석을 놓는 한편, 새 정부의 인문학, 전통문화 진흥 및 융성 기조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유교문화를 대표하는 돈암서원의 체계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해 전통 유교문화의 가치를 재창출해 나갈 것이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통과 현재가 조화된 논산의 문화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주재복 연구위원 : 얼마 전에 논산시와 우리 연구원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시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그리고 지방자치 실천을 주도하는 세계적 연구기관이자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연구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지방행정 및 지역발전 전략 연구,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자문 등에 적극 협력하기 위하여 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세미나, 워크숍, 조사연구, 사업홍보, 홍보기법 개발 등에 있어 양 기관이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창조적 거버넌스 구축함은 물론이고, 행정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장기 비전 제시 등 논산시 발전에 많은 협력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방재정 및 주민을 위한 고품질 정책개발은 물론 논산시와 다양한 협력을 통해 지방행정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고견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담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슈대담 박우량 신안군수

세계적인 해양생태환경의 보고, 1004개의 숨겨 진 섬들을 하나씩 다듬어 보물로 만들고 있는 신안군수



김병국 선임연구위원 : 민선군수로 2대째 신안군정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하신 정책과 성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성과는 신안군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박우량 군수 : 그 동안 우리 군민들께서 협력해 주신 덕분에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안군 해양생태환경 정책'과 섬주민들의 애환으로 간직한 '섬 주민 생활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1004개의 섬과 바다, 갯벌습지, 아름다운 해안선 등 세계적인 해양생태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은 우리에게 큰 소득을 돌려

줄 것입니다. 이러한 생태환경보호의 사유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주민과 공무원에게 주지시켰습니다. 생태환경의 중요성이 점차 알려지면서 주민들 스스로 빈터가 있으면 나무를 심고, 영농폐기물 수거, 바다와 도랑을 살리기 위한 친환경세제 사용, 친환경 농업을 실천함으로써 어느 지역보다 생태환경을 가꾸며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오후 2~3시면 발이 묶여 나들이를 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섬사람들은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일출 전 30분과 일몰 30분 전까지만 여객선이 운항할 수 있었습니다. 섬 교통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 면담과 정부 건의를 통하여 야간에도 여객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2007년부터 전국 최초 여객선 야간운항이 개시되고 전국 모든 섬이 야간운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야간 여객선 도착 시간에 버스를 운행이 가능하도록 전 읍면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작은섬 오지낙도의 먹는 물 해결 등 섬사람에게도 평균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그동안 운명으로 받아 들였던 섬 주민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병국 선임연구위원 : 최근 우수인재 확보가 어렵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결원율 11.9%, 9급공채 62% 채용이라는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군수님의 신안군 우수인재 확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박우량 군수 : 우리군은 도서로 형성된 특수한 근무 환경여건을 갖추고 있는 자치단체로 현 제도하에서는 우수인력을 확보하더라도 공무원의 전출 제한 규정이 최대 5년 이내로 되어 있어 법적인 전출 제한이 해제되면 인근 자치단체로 전출하는 사례가 많아 평상시 결원율이 타 자치단체 보다 높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직원들의 근무여건 중 육아문제 해결이 어려움에 따라 타 자치단체 전출을 막을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도서지역의 특수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우리군을 비롯한 도서지역 실정에 맞는 공무원채용과 인력운영, 전보제한 등 별도의 법규정 마련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도서지역 인력운영방안을 위해 “섬 발전협의회”에서 도서지역인력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연구용역이 끝나면 안전행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김병국 선임연구위원 : 신안군은 지역특성상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수님의 신안군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핵심정책은 무엇이고, 추진상의 애로점은 무엇입니까?

박우량 군수 : 우리군 1004개의 섬은 하나하나가 고유한 전통문화와 섬 사람의 애환과 삶이 어우러진 예술의 혼을 담고 있는 절대가치의 관광자원입니다.

이렇게 섬이 많다보니 그동안 인간의 간섭과 개발의 영향이 미치지 않아 아직까지 사람의 때(흔적)가 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훌륭한 경관을 갖고 있어 “힐링”이 관광의 새로운 페러다임으로 자리잡은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관광자원으로 『섬』이 전국민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군에서는 무작정 다수의 관광객을 불러들여 섬의 생태와 환경을 파괴하고 피로를 누적 시켜 섬의 가치가 훼손되는 관광정책을 지양하고, 섬이 지닌 섬 만의 느림, 불편함, 여유로움을 관광에 접목시키고, 섬문화를 잘 보존하여 섬의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친환경 생태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관광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1004개의 섬과 서울시의 22배에 달하는 광할한 공간면적을 갖고 있는 우리군은 섬마다의 특색을 잘 살린 테마가 있는 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느려서 행복한 섬 “슬로시티 증도”
○ 수화 김환기 화백의 예술혼이 깃든 “예술의 섬 안좌도”
○ 튤립과 나무정원, 만구음관이 조화로운 “모래의 섬 임자도”
○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 “평화의 섬 하의도”
○ 흑산도 아가씨의 그리움이 검게 베인 “ 동백의 섬 흑산도”
○ 여인들의 사랑 전설이 모래속에 묻힌 “사랑의 섬 비금도”
○ 사파리아일랜드와 수국향기 그윽한 “ 수국의 섬 도초도”
○ 친환경 세계명품 “천일염의 섬 신의도”

○ 한국인이 꼭 가봐야할 국내관광지 1위 “붉은 섬 홍도” 등등

하지만 추진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소외와 홀대의 대상 이었던 섬의 관광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이 경제적 효과성 논리에만 치우쳐 정부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점, 해상이라는 지리적 여건상 기상악화에 따른 잦은 여객선 통제와 배 멀미, 수도권에서 10시간 이상 소요되는 접근성의 불편함,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추구하는 관광객의 기대욕구를 충족 시키지 못하는 관광업소의 서비스 수준 저하 등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국 선임연구위원 : 신안군은 행정서비스헌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시려는 군수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군수님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철학은 무엇입니까?

박우량 군수 : 지난 2000년 5월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한 이래 지금까지 직원들에게 주민서비스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시스템에 게시하여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리적 특성상 교통이 불편함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은 원스톱서비스를 원칙으



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전체인구의 30%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하여 노인 안부 살피기, 백내장 시술비, 공영장례비지원, 노인대학운영, 노인무료급식,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보행보조차, 기초노령연금 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을 편안하게 모시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신안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선임연구위원 : 신안군 발전은 군수님과 공무원은 물론 시민사회 및 지역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은 신안군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박우량 군수 : 올해는 신안이 낳은 세계적인 추상화가 김환기화백 탄생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고향 안좌도에 수화선생의 예술을 접하고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김환기미술관을 2014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건립중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 하의도 생가에는 인동초 같은 삶과 IMF위기 극복 등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자 문화체험공간인 해양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토 최서남단 국경의 섬 가거도와 섬 자체가 천연기념물인 홍도에는 탐방로 등을 개설하고 도초도에는 민자유치를 통하여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해상관광지 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과 열악한 해상교통으로 관광객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흑산도에 소형공항을 건설하게 되었



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소형공항 건설 본격착수를 위해 지난 2011년 7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년 5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1,433억원으로 발표됨에 따라 투자비 대비 손익비율이 4.38로 경제성을 확보하여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흑산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2014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본격 착수하여 201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국 선임연구위원 : 도서지역인 신안군 특성상 재정문제 등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에게 요구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안군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길 원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박우량 군수 : 신안군은 태풍과 북서풍이 부는 겨울철이 되면 중국 등 외국에서 밀려오는 다국적 해양쓰레기가 등으로 해안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군 예산과 일부 도 예산을 지원받아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나 예산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다국적 해양쓰레기 처리사업비의 전액 국고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해결을 위한 도서식수원 개발사업비의 전액국고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고보조율대 군비부담이 7대 3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억원에 이르는 군비부담을 전액 지방채에 의존해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도서주민 식수개발사업은 지역 특성에 따른 일부 군만 해당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함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김병국 선임연구위원 : 마지막으로 신안군 발전과 신안군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향후에 군수님의 역량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군정을 운영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우량 군수 : 섬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면서 문화적이고 생태적인 가치를 지키는 일이 장기적으로 신안군 경제발전과 지역 특성화의 원동력이라는 신념으로 지방행정 최고의 가치를 '환경과 생태'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안군의 비교 우위 자원인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산업화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하고, 풍부한 해양수산자원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섬에 살아도 잘 살 수 있게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새천년대교 등 1조 2천억원 규모의 연륙 연도교 사업등 교통망 확충으로 주민에게 좀 더 편리한 섬으로 하루 빨리 변모해 미래와 비전이 있는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을 위해 남은 기간 흔들림 없이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담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최영출

충북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행정학과 교수

I. 글 머리에

그동안 정계나 학계에서 꾸준히 논란거리가 되어 왔던 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문제가 다시 정치.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2일 첫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내년 1월 31일까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및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집중논의를 한다고 한다. 본 고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문제만 다루기로 한다. 사실, 작년 대선 때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선공약으로 공통적으로 제시한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정당공천제 폐지 찬, 반 논쟁이 불어서 마치 원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필자로서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다. 2014년 6. 4일 실시될 지방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난 7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발표 한 바 있으나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여기서 논의한다는 말만 나오고 있다. 아래에서는 정당공천제 문제의 쟁점을 다시 한번 살펴 보고 왜 폐지되어야 하는 지를 논의해 보기로 한다.

II. 정당공천제의 장, 단점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존폐 문제는 정계에서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사실 통일된 견해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정당이 선거 후보자를 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영국, 미국 등 지방자치 선진외국의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더욱 대안 찾기가 어렵기도 하다. 먼저, 교과서적인 입장에서 정당공천제의 장, 단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1. 정당공천제의 장점

정당공천의 장점으로는 선거과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운영에서도 여러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는 첫째로 지역연고 중심의 기득권층 또는 토착세력을 배제하고 참신한 정치 신인의 진입이 가능하고, 둘째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주민의 후보자 선택을 용이하게 하며, 셋째로 여성 등 정치적 소수자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기제라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의 운영과정에서는 첫째로 지방자치는 가치배분을 결정하는 지방정치라는 규범적 속성과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등의 능동적인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정치적 영향과정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며, 둘째로 정당은 주민여론을 수렴하는데 용이한 조직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정당의 책임정치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정당을 매개로 중앙과 지방간의 원활한 협력과 조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정당공천제의 단점

위에서 제기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은 여러가지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은 지방자치의 특성과의 부조화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폐해로도 나타나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에 정치적 요소보다는 행정적 요소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의 문제가 지방적 관점에서 접근되지 못하고 전국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중앙정치에 예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셋째, 정당공천이 정당을 매개로 부정부패를 확산하는 통로로 작용하고 공천비리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넷째, 지역정치의 특정정당 독점으로 지방자치단체 내부적으로 견제와 균

형의 원칙이 작동하지 못하여 기관대립형의 기본 장점도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Ⅲ. 우리나라에서의 경험

1. 제도적 경과

우리나라에서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은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 제도적 변천이 있어 왔다.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보면, 크게 두 개의 시기로 구분되고 있다. 1991년 제1기 선거부터 2002년 제4기 선거까지는 정당공천이 배제되었다가, 2006년 제5기 선거부터 정당공천이 적용되었다. 이에 비하여 기초단체장은 1995년 제1기 선거부터 2010년 제5기 선거까지 공히 정당공천이 적용되었다. 정치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정당이 후보들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고, 소속정당의 표방을 통해서 중앙정당이 소속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과 책임을 함께 함으로써 지방의정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 후보의 정책적 성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중심의 선거로 인한 돈 선거의 가능성을 차단하며,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 무책임한 공약남발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도 고려되었다.

2. 정당공천의 폐해

우선, 공천과정과 관련된 문제들은 매우 다양하다. 공천비리와 사실상의 사천, 우수인재의 진입곤란, 공천불복 등이 그러한 사례들이다. 공천을 받기 위해 특정정당과 정치인에게 거액의 공천헌금을 제공하다 사법 처리되는 사례가 빈발하였고, 특히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영·호남 지역은 공천비리가 더욱 심하다는 것이다. 또한 각 정당의 정당공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상향식 공천제도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영향력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사천이 압도적인 실정이다. 정당공천의 장점으로 평가되는 우수인재의 유입도 현재의 정당공천제에서는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고, 오히려 향후 국회의원의 잠재적 경쟁자로 간주되어 배제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정당공천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은 다수의 공천 탈락자들의 불복을 초래하여 정당의 내부적 갈등뿐만 아니라 무소속 출마의 강행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음, 정당공천에 따른 공직활동의 문제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으로는 정당간의 대립과 국회의원과의 관계로 압축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정당간의 관계에서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다를 경우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정당한 사업에 대해서도 정당차이만을 이유로 지방의회 다수당이 반대를 하고,[1] 지방의회 내에서도 여야정당 의원들간의 갈

등으로 정책결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국회원원과의 관계에서는 앞서 언급한 사천의 특성으로 인해 국회의원의 지역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대표라기보다는 국회의원의 보좌역할이 우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이 방문하면 의정활동도 미루고 국회의원의 지역구 일정에 동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지방자치의 문제는 역시 중앙정치의 예속으로 지방자치가 실종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선거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이 지역별 현안이기보다는 중앙당에서 채택한 전국적인 이슈에 초점이 주어지고, 당선자인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역시 지방자치단체 운영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에 주목하기보다는 다음 선거의 공천을 의식하여 사실상의 공천권자인 국회의원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위에서 제기한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은 조사시기와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은 유지보다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지율도 거의 7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정당공천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구분	유지	폐지
기존 설문조사	한국지방자치학회(05)	24.1	75.9
	문화방송	30.0	70.0
	국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08)	26.1	73.9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09)	28.1	71.9
	한국사회연구소(09)	26.4	56.4
	아산시정연구원	25.2	74.8
한국 행정학회 (13)	단체장	12.0	88.0
	지방의원(의장 및 부의장)	13.1	86.9
	전문가	16.3	83.7
	국회의원	54.4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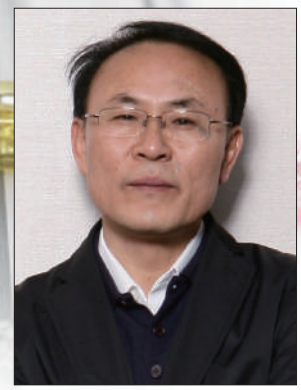
자료: 금창호 외 (2013)

1) 단양군의 경우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자원순환센터"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군의회의 관련예산 삭감으로 해당 사업이 폐지되었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013).

Ⅳ. 결론 : 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정치를 통한 책임정치의 강화라는 측면 등 장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한 까닭으로 이 제도에 대한 찬, 반 논의는 그동안 무수히 있어 왔다. 그러나 장, 단점이 혼재하는 제도인 경우, 두 가지 원칙 하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첫째는 국민의 여론이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국민여론은 조사시기와 관계없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지지해 오고 있다. 둘째는 대통령 공약사항의 이행이다. 집권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으로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제도이지만 무엇보다도 대선공약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대선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된 이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면 제시했던 공약을 재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은 적어도 대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한반도에 발생하여 엄청난 혼란이 발생한 경우, 또는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과 같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대혼란을 유발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전혀 예측치 못한 대혼란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작년 대선이전과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그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는 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서도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신 정당표방제 등 보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쟁점과 개선방안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문제의 제기

1991년 광역 및 기초의회의 구성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 20여년이 경과되었다. 그동안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지방선거제도는 주민의 직접선거라는 방식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변천을 경험하여 왔다. 특히, 정당공천은 제도변경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자리잡아 왔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지방선거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고, 따라서 최적의 후보를 선출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이 위임한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행의 지방선거제도는 선거과정뿐만 아니라 선거이후에도 다양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선거과정에서 정당공천의 적용에 따라 후보자 선출과 관련된 비리가 양산되고 선거이후에도 주민 대표성의 문제와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 및 지방의회와 단체장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공천의 문제는 최근에도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 후보자들이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이후 최근에는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하여 각계에서 찬반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의 여건변화를 고려하면, 현행의 정당공천 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을 분석하고, 적절한 개선대책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2. 정당공천제도의 실태 및 쟁점

1) 정당공천제도의 실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제도는 1991년 이후 현재까지 몇 차례에 걸쳐 변화되어 왔다. 1991년 광역 및 기초 지방의원 선거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나, 이후 199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2005년 다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관련법령이 변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당공천제도 역시 일부 변천을 경험하여 왔다. 즉, 광역의원과 광역 및 기초의 단체장은 각각 1991년과 1995년부터 현재까지 정당공천이 적용되었으나,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1991년부터 배제되었다.[1] 그러다가 2006년 선거에서부터 정당공천이 적용되어 2010년 선거에서는 광역 및 기초의 단체장과 지방의원 모두에게 정당공천이 이루어졌다. 한편, 비례대표는 가장 빈번한 변화가 이루어진 요소로 1995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1995년 지방선거에서는 정당득표율을 적용하였으나, 2002년 지방선거부터는 정당명부 투표제를 적용하였으며, 동시에 시도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여성할당제도 적용하였고, 2002년부터는 기초의원에도 확대하여 광역과 동일하게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를 적용하였다.

〈표 1〉 정당공천 및 비례대표제도의 변천과정

<table>
<tr><th>구분</th><th>1991년</th><th>1995년</th><th>1998년</th><th>2002년</th><th>2006년</th><th>2010년</th></tr>
<tr><td>관련
법령</td><td>지방의회의원선거법</td><td colspan="3">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td><td colspan="2">공직선거법</td></tr>
<tr><td>정당
공천</td><td>광역의원 당당공천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td><td colspan="3">광역 단체장 정당공천
기초 단체장 정당공천
광역의원 정당공천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td><td colspan="2">광역 단체장 정당공천
기초 단체장 정당공천
광역의원 정당공천
기초의원 정당공천</td></tr>
<tr><td>비례
대표</td><td>–</td><td colspan="2">비례대표제 실시
(정당득표율 기준)</td><td colspan="3">비례대표제 실시(정당명부 투표)
여성할당제 도입(시도 비례대표의 50%, 할당)
※ 2006년 기초의원 비례대표 확대
(여성의원 50% 할당)</td></tr>
</table>

1) 1991년 지방선거는 1990년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에 대해 여야간에 논란이 있었다. 즉, 당시의 여당은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할 것을 주장했고, 야당은 정당공천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집권기반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집권경험을 갖지 못했던 야당은 지방에서라도 집권경험을 가져 수권정당으로서의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여당은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절박한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이기우, 2013).

2) 정당공천제도의 쟁점

정당공천제도의 쟁점사항은 지방선거의 후보자 선출에서 정당의 추천권을 허용하느냐의 문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유력 후보들인 박근혜, 문재인 및 안철수 후보가 공히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기초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을 공약하였다. 당초에는 박근혜후보와 안철수후보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모두에 대해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에 비하여 문재인후보는 기초의원에 대해서만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으로 공약하였으나, 대선에 임박하여 문재인후보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모두에 대해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일반적으로 정당공천은 정치신인의 진입과 후보자 선택의 용이,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 제고, 주민수렴의 용이, 정당을 매개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제고 등의 장점이 있다(주용학, 2002; 송광태 외, 2010). 이에 비하여 정치적 요소의 우선적 고려, 지방문제의 전국적 접근, 공천비리의 양산, 기관대립구조의 상실 등의 단점이 있다(성기중, 2009; 금창호, 2011; 이상묵 외, 2010; 송광태, 외,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이 초래하는 현실적 문제들로 인하여 최근에는 기초지방선거를 대상으로 폐지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의원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논의가 우세하고, 따라서 문제의 제기 자체가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정당공천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2〉 박근혜 및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

구분	박근혜	문재인
정당공천 공 약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단, 상향식 정치문화 조성될 때까지 한시적 폐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정원의 20%는 정당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몫으로 여성에게 할당)

3. 정당공천제도의 개선방안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에 관한 논의는 정당공천의 적용에 따라 초래되는 각종 폐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정당공천제의 보완을 채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 즉, 정당공천이 적용되는 현재의 기초지방선거의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정당공천의 보완 또는 폐지의 어느 대안이 보다 유용한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에 대한 장단점이 있고, 이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

면 측정결과에 근거하여 정당공천의 보완 또는 폐지의 결정을 보다 쉽사리 내릴 수 있을 것이다(김순은, 2012).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에 대한 장단점의 결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점에서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개선대안으로 정당공천의 보완 또는 폐지를 선택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판단기준으로는 국민의 요구와 정책결정자의 의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에 따른 문제의 해결과 그 대안으로 국민들이 요구하거나 지지하는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이다.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그동안 실시되어 온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2005년 이후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에 대한 여론조사는 각종 기관에서 실시되어 왔고, 최근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지지는 조사시기와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에 관한 투입요소로서의 국민의 지지는 매우 확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의 개선대안으로 정당공천의 보완 또는 폐지에 관한 정책결정자의 수용의지는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어느 대안을 타당한 대안으로 수용할 것인가를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 후보들인 박근혜, 문재인 및 안철수 후보는 공히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기초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을 공약하였다. 당초에는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모두에 대해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에 비하여 문재인 후보는 기초의원에 대해서만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으로 공약하였으나, 대선에 임박하여 문재인 후보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모두에 대해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4대 분야 20개의 지방분권 과제를 수립하면서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보완”을 추진과제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지방정치의 쇄신차원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폐지·보완을 추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금창호, 2013). 이와 같은 논의에 따르면,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에 관한 정책결정권자의 의지도 확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의 개선방안으로 정당공천의 보완 및 폐지의 대안을 판단기준별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국민의 요구나 정책결정권자의 의지 등에서 공히 정당공천의 보완보다는 폐지의 타당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할 경우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의 개선대안으로는 정당공천의 보완보다는 폐지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당하다. 다만, 최근의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르면,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되, 대안으로 정당표방제가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타의 쟁점사항들도 정당공천의 폐지와 정당표방제의 대안선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개선방향이 모색되는 것이 필요하다. 정당표방제는 정당공천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아니나, 후보자가 특정정당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당공천과 유사한 제도이다. 따라서 선거방법은 현행의 동시선거가 그대로 유지되어도 후보자에 대한 정보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초의원의 선거구는 중선거구 자체 개혁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와 더불어 중선거구가 정당공천과 긍정적 영향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진영재, 2001) 정당표방제 도입의 경우 소선구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2)]

〈 참고문헌〉

금창호(2013).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세미나발표문.

금창호(2011).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 갈등해소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토론회 발표논문.

김순은(2012). 기초자치단체 정공천제의 폐해와 대안. 한국지방정부학회 정책세미나 발표문.

성기중(2009). 한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제 문제의 해결. 한국동북아논총. 제50집.

송광태 외(2010). 2010년 6.2 지방선거 분석과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논의. 한국지방자치학회 토론회 발표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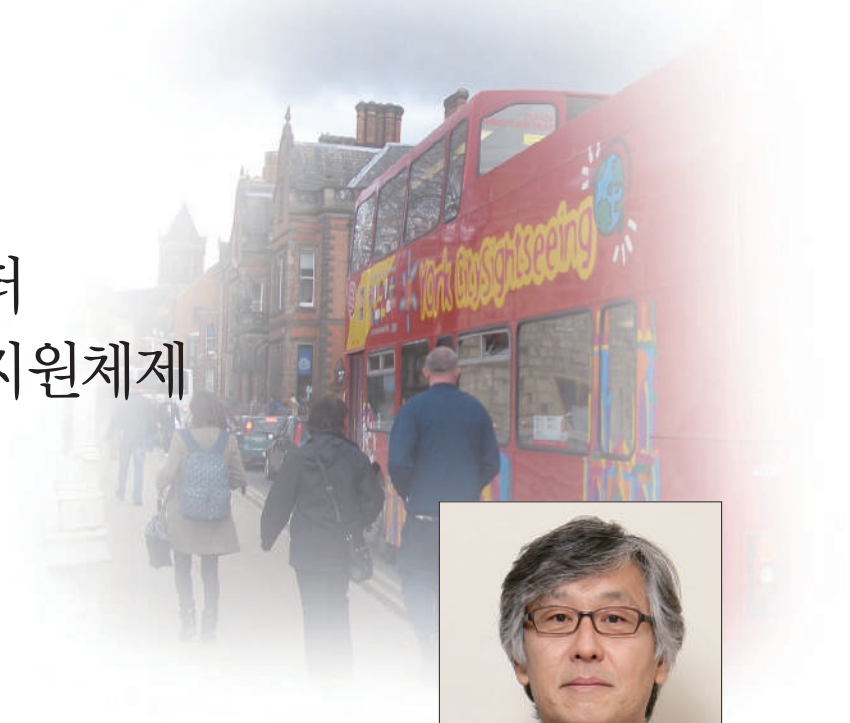
이기우(2013).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민주헌정포럼·국회의원 황주홍 쟁점토론회 발표논문.

이상묵·박신영(2010). 정당공천제와 지방의 정당정치발전: 기초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글로벌정치연구. 3(1).

주용학(2002).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1).

진영재(2001).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선택의 논리: 선거구제와 정당공천의 문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

2) 중선구제는 한국의 경우 정당표방을 유지하는 모든 후보자들이 정당을 표방할 만큼 수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다원화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진영재, 2001).



영국 맨체스터 시의회의원 지원체제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전공동체연구센터소장

1. 맨체스터 대도시의회 개요

인구 50만 수준의 맨체스터 대도시는 기관구성이 '리더(시장)+의회 내각집행부형' 이며 32개 선거구를 중심으로 96명의 지방의원이 선출된다. 리더와 집행위원으로 구성된 집행이사회는 지방의원 9명이 집행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와 분과 위원회로 운영된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맨체스터 시 지방정부헌법(Local constitution) 제6장 시의회 활동을 위한 공용물건 사용 등에 명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 간의 업무적 관계를 규정한 원칙, 조례 등도 제정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영국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기관통합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과 그 때문에 지방의회가 기관운영의 주체이고 주로 책임내각형 집행부(Cabinet System)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통치 거버넌스 시스템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모두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방공무원 중 고위직(의회직 포함) 공무원의 정치적 임용, 즉 자율재량적 임용제도가 큰 기능을 담당한다. 이 때문에 대도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헌법(Local constitution)의 내용 속에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의

원과 부처를 책임지는 고위공무원 간 업무분장, 역할분담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2. 맨체스터 시의회의원 지원체제

맨체스터 시의 지방의원에 대한 지원제도를 뒷받침 하는 근거는 시 지방정부헌법 제6장(Part 6 Section F)에서 "집행부로부터의 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으로 지원 근거가 된다. 지방의원의 개인보좌인력에 대해서는 주로 제7장 '지방의원 보수 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기본수당에 지방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사용비도 포함되어 있다.

맨체스터 대도시의회의 지방의원에 대한 지원체제에서도 영국 지방정부의회가 갖고 있는 공통점들이 보인다. 영국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주로 정당을 기반으로 한 집합적 지원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지방의원들은 전체 회의나 위원회의 회의 참석 외에 선거구에 가서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다. 사무실 제공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정당 지도자에 한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주로 스코틀랜드 지역정부의회와 같이 규모가 큰 지역정부의회, 대도시의회 등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별도의 인건비 등을 책정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기타 모든 의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원실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의원 개인 자택에서 직무수행활동 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다양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상한액을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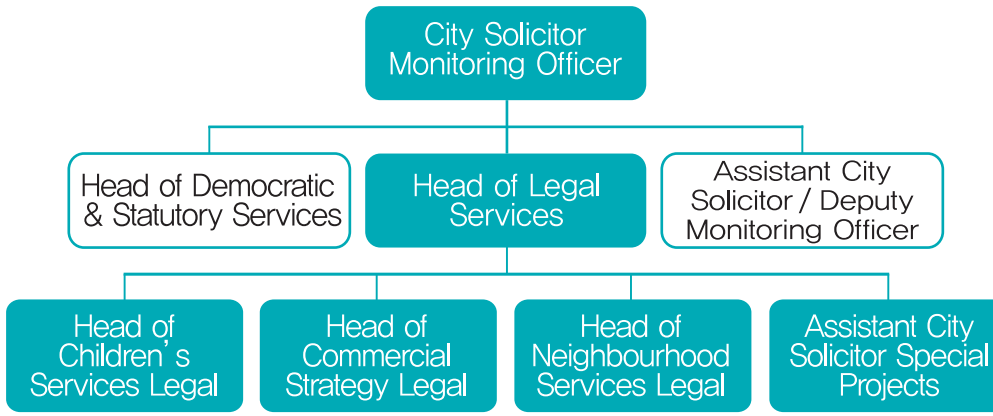
3. 지방정부 법무의정관(City Solicitor) 중심의 지원체제

영국 지방의회를 지원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는 미국의 City Clerk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시법무의정관(City Solicitor)이라고 할 수 있다. 맨체스터 시정부의 시법무의정관(City Solicitor)의 경우, 이 직위와 직무에 관해서는 시 지방정부 헌법 제3장section F에 규정되어 있다. 영국의 시법무의정관은 미국의 City Clerk과 마찬가지로 시의회의 법적 자문 등을 포함해서 의회사무처 수장의 역할과 함께, 시정부의 모든 재산 및 등기, 청원 등 법무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시법무의정관은 동시에 시업무 감찰관 (Monitoring officer)으로서 법무업무 관련 조사관, 규제심의 등 다양한 업무도 수행 한다. 집행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별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의정지원업무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단체장과 지방의회 대표자 간 통합형 방식을 혼합하고 있는 맨체스터 시정부의 기관구성상 특징이며, 영국 전체적으로 직선시장제 유형의 지방정부를 제외하

고는 거의 모두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의 〈그림〉과 〈사무분장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맨체스터시정부의 법무의정국장 (City Solicitor)은 맨체스터시 집행부 조직 하에 위치해 있으면서, 지방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맨체스터시의 시법무의정관 중심의 의정활동 지원체제



출처 : Manchester 시정부 인사위원회(Personnel Committee on 16 March 2011) 결정 사항, 2013년
내부자료 : Manchester City Constitution (시정부 헌법), 2013년 5월.

〈표〉 맨체스터시 시법무의정국의 운영체계 (2012년 기준)

시의회 법무의정국 지위	보수 (파운드)	기 능
City Solicitor (시법무의정국장)	116,238	시정부 법무관이면서 법정감찰관(Monitoring Officer) 역할을 수행하고 동시에 시의회 의정절차 등에 관한 지원을 총괄
Assistant City Solicitor and Deputy Monitoring Officer (시법무의정차장 겸 법정부감찰관)	63,501	시법무의정국장을 지원하고, 시정부헌법에 관련된 주요 법무업무, 거버넌스업무 등 담당
Head of Democratic and Statutory Services (선거법무과장)	63,501	선거업무, 선거인명부 관리, 지방의회 업무지원, 위원회 등에 법무서비스 등 지원
Head of Legal Services (의정지원과장)	75,663	시의회 의정지원, 의회운영, 의사진행 등 총괄
Head of Children's Services Legal (아동법무과장)	65,000	아동복지 지원, 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법무 업무 총괄
Head of Neighbourhood Services Legal (근린서비스법무과장)	65,000	근린서비스 및 성인복지, 고용 등 법무업무 총괄
Head of Commercial Legal Strategy (상경제법무과장)	69,128	상공업 분야 법무서비스 총괄
Assistant City Solicitor Special Projects (시사업법무과장)	63,810	시정부 정책 및 프로그램, 상경제 활동 관련 법무업무 총괄

4. 영국 제도의 특징

맨체스터 시의회의 지원체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전체 수준에서 모든 의원들에게 개인비서 또는 개인보좌관을 다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기관운영과 관련된 일상적 업무 및 정책적 업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지방의원 중 집행위원들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의원들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일반 사무경비, 비서 및 조사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방의회에서 지급하는 '사무실 운영비'(Office costs allowance)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제공할 때 상한액 사용범위를 정하고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의원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개인보좌인력을 고용하는 방식 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회에 따라서는 소속정당이 같은 여러 명의 지방의원들이 공동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내에 의원보좌실을 설치 운영하고, 공동으로 개인보좌인력을 고용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이와 연계해서 일반 사무에 대한 보조가 필요하다면 사무비서(secretaries)를, 조사에 대한 보조인력이 필요하면 조사비서(research assistants) 등을 소속 정당에 할당한 의정활동 지원비 예산총액 한도 내에서 각각 고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고용한 개인보좌인력의 보수, 근무조건, 고용기간, 업무활동의 범위 등은 지방의원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재량껏 결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소요된 경비는 비용명세서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사용하도록 세세한 규정을 정해 두었으며,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준수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기관통합형이 대부분인 영국 지방정부의 집행부 지방공무원들도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사무기구 등을 매개로 또는 직접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지원을 상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선거법과 윤리강령, 그리고 지방정부헌법에서 명확한 관계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적, 정치적 이해상충을 사전에 없애도록 명문화 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상당하다. 또한 시법무관(City Solicitor)이 집행기관 전체의 (법무)감찰관으로서 집행부 기능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의정절차, 선거인명부, 인허가절차 등 다양한 법무지원업무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통합운영체계로 유지되고 있는 점도 영국만의 특징의 하나라고 보겠다.

충청남도에서 만나는 찬란했던 700년 백제의 문화



백제 문화를 한 눈에, 부여 백제문화단지

한성과 웅진, 사비시대를 아울러 알려진 것보다 아직 감춰진 비밀이 많은 신비의 고대국가 백제를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곳이 '백제문화단지' 다. 백제문화단지 내에 자리한 '사비궁' 은 삼국시대의 왕궁 중 최초로 재현된 백제의 왕궁으로, 궁의 중심인 천정전과 천정전의 동쪽 문사전, 서쪽의 무덕전이 4,492㎡의 규모의 대지에 14개동의 건물들이 회랑으로 둘려 싸여 웅장함을 과시하고 있다.





사비성 내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능사'는 관산성전투를 지원하러 가다 신라의 매복병에게 목숨을 잃은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백제 왕실의 사찰이다. 능사에 자리한 5층 목탑은 부여 정림사지 석탑과 익산 미륵사지 석탑 등의 백제 문화유산을 참고하여 세운 목탑으로 그 위용이 웅장하다. 높이 38m인 이 목탑 뒤에 자리한 대웅전에는 백제의 미소로 잘 알려진 서산마애삼존불을 본뜬 불상이 모셔져 있다.





궁의 서쪽에 조성된 '생활문화마을'에서는 사비시대 백제인들의 생활풍습과 함께 당시 벼슬아치의 사택, 서민계급과 중류 계급의 가옥형태를 재현해놓아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귀족과 군관, 예술 및 각 분야 전문가 등 각 집마다 그들의 생활상을 재현해놓았으며 생활문화마을의 뒤로 백제 한성시대의 성으로 알려지고 있는 위례성을 재현해놓아 백제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백제의 역사·문화에 대한 자료수집과 보존, 연구 기능을 하고 있는 '백제역사문화관'은 첨단영상기법과 전시매체를 활용하여 백제역사에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6개의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백제 웅진시대를 한눈에, 국립공주박물관

백제는 한성, 웅진, 사비 등으로 시대를 구분 할 수 있다. BC18년 온조왕이 나라를 세운 이후 AD660년 31대 의자왕까지 700년 역사를 써내려간 백제는 475년부터 538년 까지 64년 간 웅진시대를 이어갔다. 64년 동안의 짧은 도읍기지만, 한성시대 이후 끊어졌던 중국과의 교역을 재개하고, 신라, 가야, 일본 등 주변 나라의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던 시기이도 하다. 고구려의 남진정책에 밀려 왕을 잃은 위기의 백제가 웅진시대를 열면서 중흥의 발판을 마련한 64년의 역사. 국립공주박물관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국립공주박물관 1층에 마련된 무령왕릉실에 전시되고 있는 무령왕릉의 출토유물은 가히 세기의 대발견이라 할 만큼 역사, 고고학, 미술사, 문화재적 가치가 지대한 것으로 백제사가 안고 있었던 의문점을 푸는 열쇠가 된다. 출토유물 중 지석의 내용과 삼국사기의 내용이 일치하여 삼국사기의 신빙성을 한층 높이는 등, 백제 역사 전반과 64년간 백제 웅진도읍기를 밝히는 타임캡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더불어 박물관 2층 충남고대문화실에 전시되어있는 유적과 유물들은 충청남도에 자리했던 고대왕국 백제의 그 시대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옛길 끝에서 만나는 천년의 미소, **백제의 미소길**

백제 미소길 (총연장 9.5km / 2시간 30분소요)

상가리주차장 → 미륵불공원 → 으름재 → 통통고개 → 국립용현자연휴양림 → 보원사지 → 마애삼존불상

예산 상가리에서 서산 용현리로 넘어가는 길은 구도를 위해 수행하는 스님들이 넘었을 옛길. 가야산(678m)과 서원산(473m) 높은 봉우리 사이 '으름재'와 '통통고개' 넘어 절과 절을 이었던 실핏줄 같던 길이 수백 년의 세월을 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만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백제의 미소길'이 그것이다.

'백제의 미소길'은 남연군묘가 있는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에서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에 이르는 9.5km의 길이다. 충청남도와 지역민이 협심하여 조성한 이 길은 2009년







11월부터 432억 원을 들여 2년 8개월 만인 2013년 7월1일 개통을 맞아 충청남도의 명품길로 도민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다. 현존하는 천년고찰 개심사가 산의 서쪽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가야산은 100여개의 옛 절터가 발견될 만큼 학계의 조명을 받고 있는 산이다. 그런 산의 자락을 타고 넘나들었던 으름재의 남쪽에 99개의 암자를 거느렸던 거찰의 옛터 가야사지(충청남도 기념물 제150호)가 자리하고 있고, 고개를 넘어 북쪽으로 가면 5점의 보물과 그 외 소중한 불교문화유산이 현재도 발굴되고 있는 보원사지(사적 제316호)가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보원사지 아래 계곡을 따라 걸으면 계곡 위 층암절벽에 백제의 미소로 유명한 용현리 마애삼존불상(국보 제84호)이 백제의 미소길 끝에서 탐방객을 반긴다.

정리 (주)소프트하우스 www.e-softhouse.com

20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공동세미나 개최

일　　시 / 2013. 11. 20(수) 13:30 ~ 17:30
장　　소 /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 (여의도)
주　　제 / 지방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서울신문
후　　원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일본 총무성, 주한일본대사관, 국제교류기금
기조강연 / 한국 : 임수복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前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일본 : 이이즈미 카몬 (일본 전국지사회 부회장/도쿠시마현 지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3년 11월 20일 수요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서울신문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안전행정부·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한국지방자치학회·일본총무성·주한일본대사관·국제교류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사진 : 상단 좌측부터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기무라 요코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이사장, 이철휘 서울신문사장, 임수복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이즈미 카몬 도쿠시마현 지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논산시 MOU 체결

일　　시 / 2013. 11. 28(화) 11:00
장　　소 / 논산시청
내　　용 / 논산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및 지원 MOU 서명 등





지방3.0 구현을 위한 행·재정 실천 방안 세미나 개최

일　　시 / 2013. 12. 3(화) 14:00 ~ 16:3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3년 12월 3일 화요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지방3.0 구현을 위한 행·재정 실천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는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3.0지원센터 수석연구원, 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분석연구센터 소장이 각각 발표하였다. (사진 : 위에서부터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고경훈 수석연구원, 이창균 재정분석연구센터 소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신안군 MOU 체결

일　　시 / 2013. 12. 11(수) 11:20

장　　소 / 신안군청 영상회의실

참　　석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신안군수 등 30명

내　　용 / 신안군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연구, 정책개발 등 창조적 거버넌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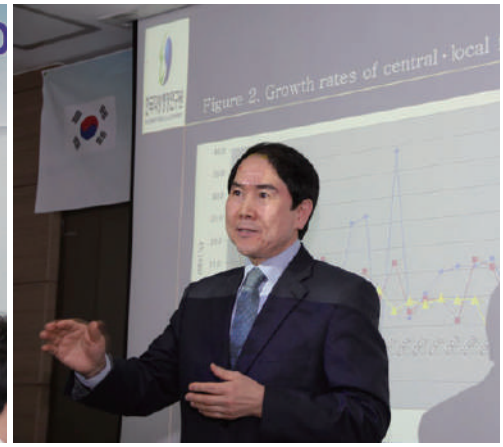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내무부 차관 및 고위공무원 방원 설명회 개최

일　　시 / 2013. 12. 10(화) 9:3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층 세미나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3년 12월 10일 화요일, 연구원 1층 세미나실에서 인도네시아 내무부 사무차관 및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지방자치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는 배정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지방행정에 있어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이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 및 운영실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발간물

● 「지방자치 Focus」 12월호(제66호) 발간

제 목 /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제도의 효율적 활용 방안
저 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부영 선임연구위원



KRIIA 교육연수

● **제4기 지역통계활성화 과정**

–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 **교육일시** / 2013. 12. 11 ~ 12. 13
–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담당자 : 김유숙 / 02-3488-7353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 실천포럼 알림마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책자 및 소식지를 **무료로 홍보해 드립니다.** 홍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T 02·3488·7361 / yjtak@krila.re.kr 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rila.re.k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서초동)
T 02·3488·7300 / F 02·3488·7309

www.krila.re.kr